

거듭나야 할 50살의 '국립중앙도서관'

목은 현안들 산적... 21세기 정보중심지로 발돋움 기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용문)이 개관 50주년을 맞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광복직후인 1945년 10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해 있던 조선총독부도서관 건물과 장서 등을 인수하면서 문을 연 이래, 74년 12월 남산 어린이회관(회현동) 건물로 이전했다가 88년 5월 현재의 반포동 자리로 옮겨왔다.

개관 5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6일 김도현 문화체육부차관 등 문화예술키 인사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진 것을 비롯 '21세기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책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와 학술논문집 발간, 특별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장서수·자료구입비 외국에 크게 뒤져

이번 기념행사에서 주요 논제가 된 사안들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앞둔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것들이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보혁명과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용문 관장도 기념사에서 "도서관이 단순히 자료를 수집·보관·운영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보의 생산과 분석, 전달에 이르기까지 정보시스템의 중추적 지지 역할을 하는 정보의 집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도서관 이용자와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21세기 꿈의 실현과 세계화라는 명분가치에 들뜬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세계화는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 95년 자료구입비 예산이 16억 6천3백만원으로 93년의 6억원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두배 이상 큰폭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92억원(94년), 미국 의회도서관의 379억원(94년)에 비하면 턱없이 뒤지는 수준이다. 미국의 회도서관이 지난 91년 신채장애자와 맹아를 위한 도서구입에만 319억원을 사용한 것과 서울대학교도서관의 95년 예산구입비가 기금포함 40억원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의 2.5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앞둔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정보혁명을

주도해야 할 국립중앙도서관은,

선진국 수준을 밀도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

지적 생활을 뒷받침할 정보의

중심센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50살의 중년으로

성장한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바람이다.

욱 증폭된다.

물론 94년 기준 정부회계 예산증가율이 13.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격적인 상승폭이긴 하지만 '자국 납본도서 확보율 100%, 해외주요도서 확보율 5%'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서수에 있어서도 90년 168만책에서 95년 현재 249만책으로 크게 늘었지만, 국가의 모든 문헌을 수집 보존하고 자국의 문헌은 물론 국제적인 서지정보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출판량은 세계 10대 출판국에 속하면서 장서수에 있어서는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1천4백만책(94년 6월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장서수 321만책(94년 3월말)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 국립도서관의 정보 집중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에서도 97만건을 구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923만건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10% 선에 머무르고 있다.

개관 5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전진을 외치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와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의 보다 구체적인 본격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용자 중심의 친숙한 도서관 돼야

도서관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지난 10월15일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5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볼 수 있다. 자료, 시설, 사서, 이용자그룹이 그것이다. 이중 이용자 그룹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위치문제와 열람의 불편함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용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이나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 내려 몇개의 신호등을 거쳐 한참 걸어가야 한다. 입구에 도착해서도 열람실까지는 적지 않은 다리품을 팔고 올라가야 한다. 이용자들은 "자주 오지 않는 마을 버스를 기다리느니 걸어가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얼마전 완공된 "검찰청이나 대법원에 비해 한심할 정도로 멀다"는 여론도 있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는 열람의 문제도 한몫한다. 이용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근대사를 연구하는 정혜경씨(33, 경기도 성남)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을 뒤져 일제시대에 간행된 《도쿄매일신문》《도쿄조일신문》 등 일본일간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식민지 조선과 제일 한인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것들이어서 도서관 관계자에게 열람을 신청했다. 그러나 답변은 '열람불가'였다. 1945년 이전의 신문은 보관용 1부밖에 없어 열람을 금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그렇다고 그 신문을 보기 위해 일본 현지에 갈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정씨는 난감했다.

회귀본이나 고서들은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측은 이용자에 대한 배려에 있어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국회도서관과의 위상문제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제 개관 50주년을 맞아 21세기 정보 보존과 집적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민의 지적 생활을 뒷받침하는 정보봉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50살의 중년으로 성장한 국립중앙도서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 허 연 기자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